

## 제 목 일본 인구전략회의의 「인구비전 2100」 주요 내용

◆ 일본 인구전략회의\*는 2100년 총인구 8,000만명\*\*, 고령화율 30%를 목표로 하는 「인구비전 2100」을 발표하였으며, 이를 총리에게 제출(1.9일)

\* 학계, 연구원, 경영인 등으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회의(회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 제철 명예회장)로 '23.7월 발족. 일본정부 산하의 공식 위원회는 아니며 민간 정책제언의 일환으로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

\*\* 일본 인구는 '22.10월 기준 1.25억명으로 '08년(1.28억명)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

○ 후생노동성(국립사회보장·인구문제연구소)은 2020년 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2100년 인구를 6,300만명으로 추계

◆ 3가지 기본과제와 2가지 인구전략을 통해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막고 지금보다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이고 성장력 있는 사회구축 추진

## 1. 3가지 기본 과제

① 인구감소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·경제적 부작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의식을 공유

○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의한 축소지향 사회 지속, 인프라 및 서비스 축소에 의한 지방 소멸, 궁극적으로 광범위한 사회·심리적 정체현상 발생

② 청년층과 여성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 노력

○ 청년층의 의식과 실태를 근거로 하여 결혼과 육아가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

— 정규직·비정규직 격차, 출산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, 남성의 저조한 육아 참여 문제 해소

③ 세대간 계승과 연대를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고, 공동 양육사회를 지향

○ 현 세대의 대처가 수십년 후 미래세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며, 공동 양육사회를 실현\*하기 위해 사회와 지역, 국가가 힘을 모아 정책을 펼쳐나갈 필요

\* 모든 자녀의 출산과 육아를 국가 또는 사회가 지원하는 보편적 가족정책 수립

작성자 : 동경사무소 최재혁 차장

## 2. 2가지 인구전략

① **정상화 전략** : 인구감소 속도를 완화하여 최종적으로 안정화시키는 전략(인구정상화)

- 이를 위해 ①청년층의 소득향상·고용개선 ②맞벌이·공동육아 실현 ③라이프사이클 다양화 ④육아지원의 종합적인 제도 구축과 재원 확보 ⑤도교 집중 해소 등을 통한 주거·통근·교육비 문제 해결 등이 필요

② **강인화 전략** : 사회의 질적인 강화를 도모하여 현재보다 작은 인구규모에도 다양성이 풍부한 성장력 있는 사회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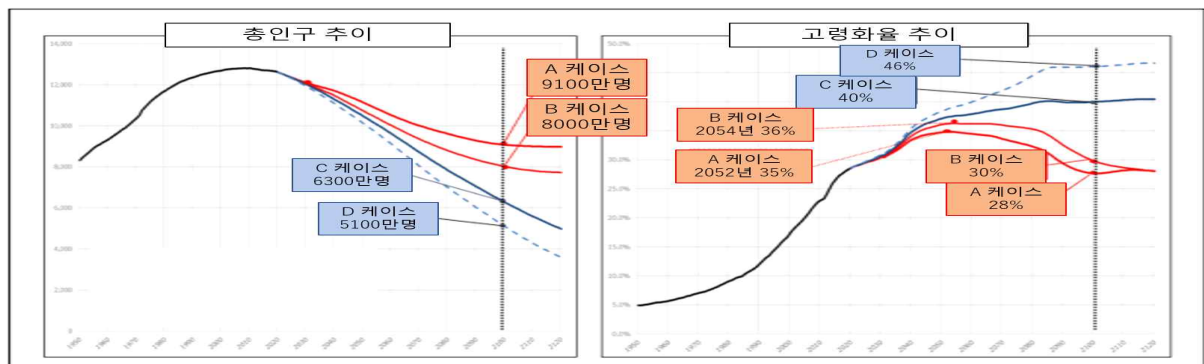
-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, 교육비용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적 향상 등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 등을 실시

⇒ 2가지 인구전략을 실현하여 최종적으로 **8,000만명의 인구를 안정적으로 유지** ('아래 표'의 B 케이스)

- **합계출산율**을 현재 1.26에서 **2060년 2.07**로 높이고, 외국인수는 2040년 이후 균형을 유지(2100년 외국인 인구 비중은 10.4% 수준)
- **고령화율**은 2054년 36%를 고점으로 2100년에는 30%로 하락
- 2가지 인구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경우 2050~2100년 경제성장률 연평균 0.9% 수준 유지 가능

### 2100년 인구 규모 및 구조

	총인구(만명)	고령화율	외국인비율	인구 상황
A 케이스 (출생률 급회복)	9,100	28%	10.4%	합계출산율 2040년 =2.07 2040년 이후 국제이동균형
<b>B 케이스 (출생률 회복)</b>	<b>8,000</b>	<b>30%</b>	<b>10.4%</b>	<b>합계출산율 2060년 =2.07</b> <b>2040년 이후 국제이동균형</b>
C 케이스 (장래추계, 중위)	6,300	40%	15.5%	합계출산율 = 1.36 외국인 증가(연 16.4만명)
D 케이스 (장래추계, 저위)	5,100	46%	15.6%	합계출산율 = 1.13 외국인 증가(연 16.4만명)



### 3. 향후 추진방향

- 인구전략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정부, 국회, 지역, 민간을 포괄하는 정책 프로세스 구축 추진
  - ① EBPM(Evidence Based Policy Making)에 기반한 정책체계 구축
    - 현재 추진중인 ‘저출산 대책’, ‘어린이 미래전략’ 등의 효과를 검증하고 여성·청년층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인구전략 아키텍처 구축
  - ② 내각에 인구전략을 일체적·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체제 구축
    - 인구전략의 입안·수행을 총괄하는 기구를 설치하고, 산하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저출산 대책, 외국인 정책 등의 조사·연구를 강화
  - ③ 국회에서의 초당적 합의 형성
    - 인구전략의 목표나 주요 정책의 내용, 프로세스 등에 대한 초당적 합의 형성을 도모하고, 국회내 인구전략을 심의하는 상설조직 설치
  - ④ 민간 및 지역의 대처 노력 강화
    - ‘일하는 방식 개혁’ 등 사회 규범이나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하여 기업을 비롯한 민간의 대처가 중요하며, 재계 및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 기구 설치 추진
  - ⑤ 지방과 도교권의 대처
    - 지방자치단체와 경제계·노동계 등이 협력하여 지방의 인구전략을 입안·수행하고, 도교권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구전략 조직을 설치하여 저출산 흐름 전환을 위해 노력

#### <참고>

#### 영·정주 외국인 정책

- 한편 동 보고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해 인구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‘이민정책’은 실시하지 않고, 노동 목적의 영주 및 정주(체류기간 제한)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을 제언
  - 인구정성화를 외국인 유입으로 보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수의 이민이 필요하여 비현실적이고, 사회안정성 위기 가능성 등 장래의 모습을 전망하기 어려움
  - 노동 목적의 외국인은 고기능 및 전문 인재를 기본으로 해야 하며, 비숙련·저임금 외국인 유입에 대해서는 논의 전에 생산성이 낮은 산업 및 기업 등에 대한 구조개혁 노력 경주 필요
  -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 2세대 이후의 교육이나 사회참여를 확보하고, 사회·문화 및 국제정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